



## 입법정책정보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목차

I. 법령 제·개정 .....	1
○ 동물보호법 .....	1
○ 과학기술기본법 .....	3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4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4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	5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6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	6

##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라.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마.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조례관련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3호, 2022. 6. 10., 일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관련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3.] [부산광역시조례 제6674호, 2022. 4. 13., 제정]

#### □ 제정이유

부산시의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제3조)
-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5조)
-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제6조)
-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공정무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음을 정함(제8조)
-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시행 2022. 3. 25.] [인천광역시조례 제6805호, 2022. 2. 24., 제정]

###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마.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III

##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안전번호의견22-0146, 요청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 □ 주요내용

##### [의뢰내용]

가.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인권에 관한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수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강진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일반적으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각주: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살피건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계 국가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각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지역적 단위를 불문한 모든 공권력의 주체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국가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구현 방식이 주로 복지나 차별대우 금지 등과 관련되어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인바, 강진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이행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각주: 법제처 2019. 10. 1. 의견제시 19-0311 ).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8. 3. 30. 의견제시 18-0072)임.

살피건대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진군조례안”이라 한다)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 자치조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강진군조례안에서 인권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하는 경우 국민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社)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강진군수가 강진군조례안에 따라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강진군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었는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각주: 법제처 2016. 3. 15. 의견제시 16-0054).

따라서, 강진군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으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기 바람.

[자료출처: 법제처]